

## 요약

## 취약계층 보호·고용안정·적정임금 보장사업 실행력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마련해야

### 사업 간 우선순위 정하고 정책 시너지 효과 높이는 전략사업 발굴 필요

서울시가 2015년 4월 발표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의 비전 실현을 위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 구축’ 등 4대 정책과제, 61개 단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노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조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 노동정책은 매우 방대하고 세부적이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고용 질 개선, 노동권 보장에 우선순위”

서울시 노동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4%가 서울시 노동정책의 전략방향으로 ‘공공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공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고용 질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등의 정책과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정책대상으로는 중소기업사업장 근로자(42.5%), 청년(26.3%), 여성(15.0%)의 순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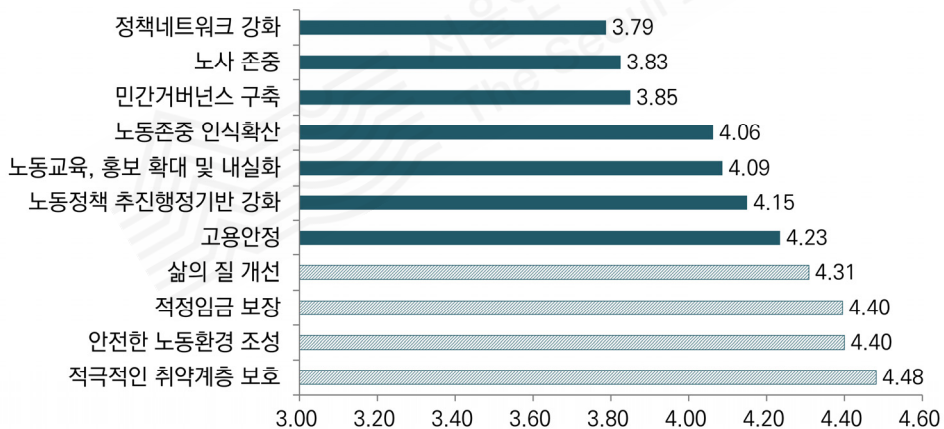
[표 1] 4대 정책과제의 중요도 평가

(5점 척도)

구분	그룹별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	전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4.74	3.64	4.64	4.51
기본권보장기반 구축	4.71	3.07	4.44	4.31
고용 질 개선	4.68	3.50	4.67	4.47
노사관계 상생협력	4.03	3.92	3.83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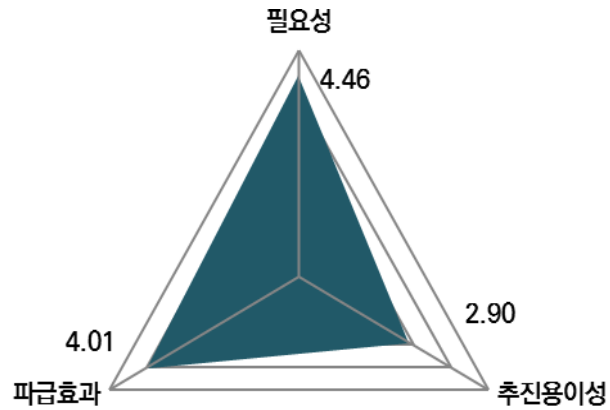
## 임금, 노동환경, 고용안정 포함한 취약근로자 보호정책이 가장 중요 지적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상의 11대 핵심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은 ‘적극적인 취약 계층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적정임금 보장’, ‘삶의 질 개선’, ‘고용안정’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임금, 노동환경, 고용안정을 포함한 취약근로자 보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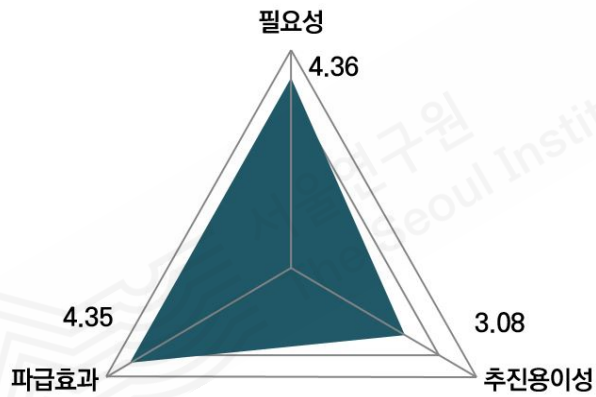


[그림 1] 11대 핵심사업의 중요성 평가(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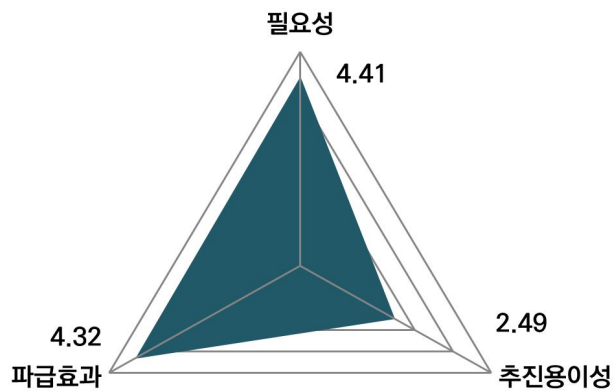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사업인 ‘취약계층 보호’,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등의 사업의 경우, 추진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5점 척도로 ‘취약계층 보호’\_필요성 4.5점, 추진용이성 2.9, ‘적정임금 보장’\_필요성 4.4, 추진용이성 3.1, ‘고용안정’\_필요성 4.4, 추진용이성 2.5). 따라서 향후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적극적인 취약계층 보호(5점 척도)



[그림 3] 적정임금 보장(5점 척도)



[그림 4] 고용안정(5점 척도)

## 서울시,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간접고용근로자·민간으로 확대시행 바람직

---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임금을 민간위탁·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노임단가(예정가격) 산정 시 생활임금 적용, △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가산점 부여, △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생활임금 보전 의무 조항 신설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용역 업체에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국 런던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소재 주요 민간기업과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협약 체결, 캠페인 실시 등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1만 3천여 명의 고용안정화대책도 마련해야

---

2014년 2월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는 정규직 11,215명(약 83%), 비정규직 2,336명(약 17%)으로 총 13,551명이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고용불안이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화대책도 필요하다.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객관적인 인건비 책정기준 마련 및 생활임금제 적용 검토, ‘대금-e바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인건비 중간착취 방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시 지속적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명문화, 재위탁·재계약 심사 시 수탁기관의 고용안정화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고용 불안정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 위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도 대안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적서비스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높은 영역이다. 또한 복지사업의 증가추세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정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민간부문 근로자를 취약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으로 설정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가칭)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다.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는 돌봄 근로자를 (가칭)사회서비스재단에서 채용하고,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를 갖춰 안정적인 고용상태에서 공적서비스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고용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델이 정착되고 성공한다면, 민간부문의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 파급력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기본권 보호·사회 공감대 형성 도모 ‘노동법 지키기 캠페인’ 추진

서울시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동근로자 쉼터,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캠페인,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보호,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다수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노동권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키기에는 지방정부로서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취약근로자의 기본노동권 보호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사민정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노동법 지키기 서울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 지키기 서울캠페인’은 서울시 노동환경의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어 노동법이 존중되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목표로 ‘임금체불 근절’, ‘근로계약서 작성’, ‘최

저임금 준수, '성희롱 근절', '산업안전법 준수' 등 5대 의제를 정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노동법 지키기 서울캠페인'의 추진 조직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틀을 넘어서는 조직구조로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캠페인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른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전략캠페인을 실시하고 업종별 사용자단체와 협력하여 노동현장 밀착형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캠페인의 실행력 및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일가양득' 등 고용노동 관련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현장 밀착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취약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